

●● 제1회 정책경연의 장 (2021년 2분기)
 ●● 정책위원회 및 정책기획조정회의 심의 주요 제언

No.	위원회	정책명	평가 (○/△/×)
	홍보위원회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지원을 위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지원 특별위원회 설립	
1	<p>코멘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접근은 시의적절 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통한 해결법을 찾아야겠습니다. -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보다 정체성과 법적 권한이 더 낮은 것으로 보임. 그리고 (4p) ‘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지원’ 의 세부 정책은 필요성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 정부개입은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임, 일단 일반적인 기업 지원보다는 규제혁신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현재 관련 전담조직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음. 하지만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해 차기정부 조직개편 시 가장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재편 논의가 있음).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 혹은 4차산업위원회에서 정책화하는 내용과 연계되어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는 의제들이라 중요성,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산자위와 의원실에서 추진 가능, 단 용어의 변경이 필요해 보이고, 특별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법안이 먼저 추진되어야 함. - 필요성은 매우 공감됩니다. 차기 정부의 아젠다로는 좋아 보입니다. 위원회보다 상설기구로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 용어나 어휘를 우리말로 바꿨으면 함 - 국회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구성결의안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 부대 예산에 대한 추가연구 필요, 지원과 경쟁력 반비례 부작용 완화책 마련 		

	홍보위원회	녹색 성장을 위한 정부 조달 사업 입찰 프로세스의 전자화 의무 제도	
2	<p>코멘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페이퍼리스가 안되는지 인터뷰가 보완되면 더 좋겠음. -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시대전환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제안입니다. - 정책의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대안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면서 정교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동의, 단 전자입찰 시스템을 담당자가 화면으로 모든 것을 보기 힘든 부분도 있어 인쇄물이 필요한 할 것으로 보임, 유연성이 필요해 보임. 		
3	기후환경에너지위원 회	선거공보물 및 현수막 등 선거폐기물 최소화 및 온라인제공의무에 관한 방안	
	<p>코멘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를 앞두고 꼭 필요하며, 이슈화 시키기에도 좋고, 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 온라인에 대한 취약층을 배려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제공시 실제 받는지 그리고 정보격차에 대한 소외자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전달이 확인될 수 있는지 장치 고민이 필요. - 선거제도에 환경을 고려하는 접근 적절합니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대체제로서 합당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명함을 대체하거나 현수막을 대체할 매체에 대한 모색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정책과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선관위에서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4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의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구조개편	
	<p>코멘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대학교 재정지원사업을 교부금으로 바꾸면 좋은 효과, 그리고 교부금으로 바꿀 경우, 혹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의 교부금 신설이라면 내국세를 나누어 갖는 형식이라,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국가 큰 틀에서 조정이 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이나 고민이 필요. -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긍정적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부실화 초래가 있을 수 		

	<p>있으니 중앙부처가 컨트롤 타워역할을 겸하여야 한다는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기업체의 연계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구감소 대비 대학 구조조정과 고등교육재정 구조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나 대안의 구체성이나 정책 방향은 재논의가 필요함.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가 있을 수 있음. 교육부가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 운영을 통제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나 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사무위임에 관한 조항에 부합하는지도 확인 필요 - 대학개혁과 관련해서는 산업사회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마중물 펀드 같은 것으로 효과가 날 수 있을까에 의문점 있음.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으로 남기기보다는 연구중심의 지역센터, 커뮤니티 교육(평생교육)에 중점을 두는 개혁이 더 필요해 보임. 	
5	장애인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6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p>코멘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 관련 전문가들이 전공 분야를 살려서 생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시장의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 장애인 돌봄에 관한 전문인들 육성과 장애인 처우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될 수 있음. 단 허가제 변경에 앞서 전문인 교육과 인력확보 등을 위한 공급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장애인 대상 효과 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 -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은 굉장한 규제라는 점, 의지보조기사를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것 사업주들의 반발 고민. 의지보조기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의사면허와 단순비교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다만, 의지보조기사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사의 지도'보다는 일정한 규모-매출기준으로 의무채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음. - 전문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나, 업소의 허가제는 규제로 현실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 정책 의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대안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면서 정교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p>코멘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더 깊이 있는 법적 논의가 필요. - 세금의 불필요한 중복, 낭비, 과다 지출을 줄이면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p>좋은 정책 같습니다. 정산에 대한 치밀한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나, 현금지급에 대한 사회적 우려 (수용성), 계획서 수립 및 대행 과정에서 장애인을 이용하는 사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해야 할 것. - 활동지원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줄 것인지 서비스제공자에게 줄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이 필요. 개인에게 지원할 경우 관리와 부정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있다면 더욱 좋겠음. - 정책 의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대안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면서 정교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장애인위원회	한국수화언어 기본법 개정안
8	청년위원회	랜덤 박스, 확률형 아이템 판매 규제
	<p>코멘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외적 상황을 인식하게 됨.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나, 수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의사소통급여를 줄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활동서비스법의 서비스 다양화를 통하여 지원할지 판단이 필요. 수화서비스가 사회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통합 관리되도록 하면 어떨지 검토 필요. - 개인별 급여량을 적게라도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됨, 많은 예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임. - 정책 의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대안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면서 정교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p>코멘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규제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임. 다만 정부에서 규제안을 만들어 논의 중이고, 게임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계획하고 있어 현재 제안된 내용을 능가하는 정책대안이 이미 논의되고 있음.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우리 당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함. 관련 기사 아래 링크 참조. https://news.v.daum.net/v/20210615142002538 - 규제보다는 소비자보호정책을 강화하면 좋을 듯합니다. - 사행성에 가까운 영업방식. 사실상 행운을 조장한 사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필요해 보임. 	

- 일괄적인 규제 보다는 과도한 중독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위원회	청년 영양 진흥 조례
9	<p>코멘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과급효과 클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 매우 좋은 논의라고 생각함. 다만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 추가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점은 생활고가 아니더라도 자극적이고 자본주의적(먹는 것이 아닌 팔기 위한) 음식에 청년 당뇨 및 성인병이 급속도로 성장 중.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청년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이 붓물을 이루고 있지만 젊다는 이유로 영양에 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음. 청년이나 아동이나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영양공급, 영양균형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진흥법(조례?)를 만들되 그 내용의 구성은 도시의 구조나 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 지역별 방안(지역의 조례)을 만들 수 있도록 모범을 열어두는 것도 방안일 것임. - 기본소득과 연계 모색 필요 - 영양이 부족한 청년을 어떻게 선별할지 가령 수급권으로 한다면 이미 생계비 등에 포함, 그 이외의 자라면 어떻게 선별할지, 현물 지급이라면 청년푸드뱅크나 청년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이미 일부 지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